

가치형태론에 존재하는 한 가지 이질성에 관한 연구

홍 훈

『자본론』 1장 3절에서 논의되고 있는 형태론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等價形態의 세 번째 특징으로 제시된 사적·사회적 노동의 구분이 여타 두 가지 특징과는 달리 1, 2절 및 相對價値形態에 관한 논의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어 抽象·具體勞動의 구분과 私的·社會的勞動의 구분이 이질적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맑스의 가치론 및 화폐론에 있어 균형이 상실되어 있다. 그러한 이질성은 전자의 구분이 교환의 동식에서 兩極에 각기 '추상'과 '구체'를 배치시키는 구도인 데 비해 후자의 구분은 양극에 모두 '구체'를 배치시켜야 하는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전자의 구도는 勞動이 富의 源泉이자 再生産 기반이라는 의미에서 가치실체론을 중심으로 논리가 전개되고 있고 사용가치를 가치실체에서 배제하는 대신 가치형태의 역할을 독점케 하는 非對稱性을 띠고 있다. 이에 비해 후자의 구도는 生産의 無政府性이라는 자본주의의 固有性에 근거를 두고 있어 사용가치의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성격과 상품이 勞動의 生産物로서 노동분업관계를 매개한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가치실체론이 화폐론과 제대로 결합되지 않았으며 노동가치론이 보다 구체적인 가격을 설명하는 데 있어 순조롭지 못한 논리전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법론적으로는 일상적인 관찰의 대상에서 분석의 출발점으로 설정한 대상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균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체론, 상품화폐론, 그리고 상품물신론 중 적어도 한 가지가 포기되어야 할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원전을 해독하려는 노력은 좌우를 막론하고 경제학과 사회과학 전반에 있어서 학문의 자립성을 구축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맑스의 사상에 대해서는 그의 全體系 속에서 원문을 통해 제대로 해석하는 것은 맑스 자신과 맑스주의의 기존 발전을 평가하고 이론적인 돌파구를 찾아내는 데 더욱더 긴요한 밑거름이 된다. 특히 해방 이후 한국의 사회과학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맑스의 사상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일반 및 경제 사상을 되도록 원전에만 의존해 자립적으로 해석해 보고 이를 통해 그의 생각을 해독해 내며 그러한 해독의 방법을 제독하려는 노력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¹⁾ 이와 같은 전반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본 논문은 『자본론』 I권의 가치론에서 발견되는 일견 미세한 논리의 돌출성 내지 이질성에 관해 해명하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²⁾

I. 논리의 突出性 혹은 異質性

우선 논리적인 돌출성 내지 이질성이 왜 제기되어야 하는지 보자. 價値形態 및 等價形態에 관한 논의의 줄거리는 ①相對價値形態－價値－抽象勞動, ②等價形態－使用價値－具體勞動인데 여기에 일방적으로 私的·社會的勞動의 구분이 ‘삽입’되고 있다.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다.

- p. 56 “우리를 주목케 하는 첫 번째 특징은……다음과 같다. : 사용가치가 그것의 반대인 가치의 발현형태, 현상형태가 된다.”
- p. 58 “그래서 등가형태의 두 번째 특징은 구체노동이 그것의 반대인 추상적인 인간노동이 발현되는 형태가 된다는 것이다.”
- p. 59 “그래서 우리는 등가형태의 세 번째 특징, 즉 사적인 개인들의 노동이 그것의 반대인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노동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첫째, 이 이전의 논의가 실체를 중심으로 ①과 ②에서 언급된 개념들을 확연하게 정의하고 있는 데 비해 사적·사회적 노동의 구분은 그 이전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다가 돌발적으로 중요성을 띄게 되었다. 둘째, 4절등 이후의 논의에 의존해 참고로 이 구분의 의미를 이해해 준다고 하더라도 ①과 ②로 구성되는 대칭 구도에 이 구분이 과연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³⁾ 기존 논리전개로 보자면 상대가치형태와 등가형태에 각기 사회적 실체와 구체적 물체가 자리잡고 있는 데 비해 사적 노동과 사회적 노동은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이러한 결합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①과 ②에 사적 노동과 사회적 노동의 순서로 연결시키려고 할 경우 가치나 추상노동이 사회화되지 않은 노동과 연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며 그 반대의 순서로 하는 경우에는 상품이 이미 사회적 성격을

1) 원전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줄고 [2], pp. 11~14에서 다소 상세히 논의한 바 있다.

2) 이하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문헌적인 전거는 모두 『자본론』 I권, MEW版을 지칭하는 것이다.

3) 이후의 논의에서 『경제학비판』, 『경제학요강』, 그리고 『잉여가치학설사』는 각기 『비판』, 『요강』, 그리고 『학설사』로 약칭된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 되고 화폐의 초보적인 형태인 등가형태가 사적인 노동이 되어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순서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① 및 ②의 구분과 사적·사회적 노동의 구분은 서로 이질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의 구분에 포함되어 있는 추상·구체노동은 모든 노동의 양면성으로 그 노동에 항상 공존하는 것인 데 비해 같은 노동이 사전적으로 동시에 사적이면서 사회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합상의 문제점들 때문에 논리의 돌출성은 험사리 불식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전의 논의를 추적해 보면 구체·추상노동의 구분과 사적·사회적 노동의 구분이 『자본론』 1장 2절과 『비판』 1장에서든 어색하게 병존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1장 2절의 경우 사회적 노동에 대한 설명없이 사적인 노동이라는 표현이 사용가치 및 분업과 연관되어 ‘슬머시’ 언급되고 있으며 가치를 구성하는 노동에 관해서는 사회적인 성격에 대한 언급없이 1절에서와 같이 동등성만이 강조되고 있어 양자간의 이질성이 불완전하나마 내재되어 있다. 더 저슬러 올라가 『비판』의 1장에서는 가치실체가 도출과정없이 선언되고 있으며 ‘동등한’(gleich) 노동과 ‘사회적’(gesellschaftlich) 노동이 상호 연관없이 나열식으로 언급되거나 거의 혼용되고 있다.⁴⁾ 또한 상품에 관한 학설사적인 비판(제1장 부록 A)에서 맑스는 여타 경제학자들에 대한 비판의 기준으로 사용가치·구체적인 노동과 구분되는 것으로 가치·동등한 노동과 함께 사회적 노동이라는 표현을 무차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서 맑스는 전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후자를 이해하고 있는 스튜어트(J. Stuart)와 그 반대인 리카아도를 대비시키고 있어 양자가 동일하거나 양자의 결합이 자명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

II. 사적·사회적 노동의 구분이 상대가치형태에서 논의되지 않은 이유

기본적으로 이 구분이 논의되지 않은 이유는 III과 IV에서 밝혀지는 대로 이 구분이 사용가치 혹은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대상성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데 비해 형

4) 나열식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p. 18 “Zum Verständnis der Bestimmung, in Tauschwerten resultiert.” 부분이며 거의 혼용되는듯이 보이는 대표적인 전거는 p. 17 “gleichförmige, unterschiedslose, einfache Arbeit,” “abstrackt allgemeine Arbeit” 등을 들 수 있다.

5) 물론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추상노동과 사회적 노동이 일체성 있게 결합된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따를 경우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론은 맑스에 대해서 지나치게 동정적인 견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추상·구체노동의 구분과 사적·사회적 노동의 구분을 제대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맑스의 이론적 과제를 이미 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그와 같은 일반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셈이다.

태론의 논리전개는 이것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1장의 1~3절까지의 논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사용가치를 배제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자.

상품으로부터 시작한 가치론은 1절에서 사용가치를 사회형태에 관계없는 보편적인 존재로서 간주한데 이어 가치실체의 추상화과정에서 동질적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하여 배제한 후 3절에서 실체를 표현해 주는 수동적이지만 필연적인 존재로 재설정하고 있다. 이것을 상품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된 근거, 가치실체에서 사용가치를 배제한 이유, 그리고 가치형태로서 사용가치가 '복원'되는 것으로 나누어 보다 자세히 논의해 보자.

1. 『자본론』 출발점이 상품이 되어야 하는 이유

상품이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데(p. 35) 이것의 의미는 사용가치, 노동, 화폐, 그리고 자본 등이 출발점이 되지 않는 이유를 개별적으로 해명함으로써 밝혀낼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상품이 '자본주의 生産關係를 나타내 주는 가장 單純한 具體物'이라는 맑스의 언표(Randglossen)가 이러한 해명에 단서가 될 수 있다.

p. 361~362 ".....상품이라는 구체물로부터....."

p. 369 ".....가장 단순한 사회적 형태....."

".....노동 생산물의 구체적인 사회적 형상....."

".....가장 단순한 경제적인 구체물....."

p. 375 ".....'사회적 물체', '상품'....."

일본 자본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없는 자명한 이유는 상품보다는 훨씬 발전된 범주이기 때문이다. 화폐 역시 상품보다 발전된 범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맑스의 입장에서 상품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상품보다 나중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화폐와 자본이 출발점이 될 수 없는 것은 위의 언명 중 '가장 단순한'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더구나 나중에 설명되는 대로 화폐로 출발하는 경우 단지 화폐에 대한 설명을 포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폐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낳을 수 있다. 화폐를 사회관계로 보지 않고 물체로 보게 되어 그것의 성격을 자연적 속성으로 간주하는 물신성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의 경우에는 아마도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인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비추어 해명될 수 있을 것이며 위의 언명 중 '具體物'에 어긋나는 것이다. 구체물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현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물이 사회·생산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회·생산관계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맑스는 뒤에서 논의되는 대로 物神崇拜論 등에서 여타 생산양식의 경우와는 달리 자본주의의 사회관계는 物化되어 나타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일견 물체로 보이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구체물이 분석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대상들 중에서도 생산관계를 해명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생산관계의 단순한 형태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논의는 사용가치가 출발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압축된다. 상품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 중 하나인 사용가치가 전반적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경제활동이라고 지적한 것이 맑스의 입장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p. 36 “……富의 사회적인 형태가 어떤든간에 이것들은 또한 모든 부의 실체를 구성하고 있다.”
- p. 42 “양복점 주인이 입든 아니면 그의 고객이 이것을 입든 그것은 사용가치로 기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이 사용가치의 창출자인 한에 있어서는 모든 사회의 형태와 무관하게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다.”

기본적으로 사용가치는 위의 언명 중에서 ‘구체물’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만 ‘자본주의 생산관계’라는 요건에서 벗어난다. 이에 대해서는 맑스의 방법론적인 입장에 비추어 해명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V에서 상론되는 대로 이 점은 상당히 불완전한 부분이므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방법론적인 입장들을 열거한 후 다시 종합해 맑스의 의견을 추정해 보자.

- ① 전반적으로 특정 생산양식 내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고유성이 논의되어야만 한다는 것(p. 18).
- ② 자본주의의 경우 상품물신성이 인식의 내재적인 장애가 되어 자본주의의 고유성과 역사성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게 한다는 것(4절).
- ③ 논리적인 도출이 역사적 과정에 대한 논의보다 적어도 서술면에서 앞선다는 것(뒤에서 논의되는 대로 1장에서 가치실체 및 형태의 주요 골자를 모두 논의한 후에 2장의 과정론에서 사용가치가 상품이 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 4~5장에서 고리대자본 내지 상업자본과 산업자본의 운동구조 간의 관계, 그리고 7편과 8편에서 원시적 축적과 자본주의 본연의 축적 간의 관계 등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보다 발달된 사회형태를 논의함으로써 덜 발전된 사회형태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요강』 p. 39).

⑤ 인식은 현상의 운동이 낳은 결과에서 시작되며 역사적 발전과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p. 75, 『학설사』 3권 pp. 449~450).

①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는 모든 생산양식에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특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②에서는 자본주의의 고유성 그 자체가 그러한 고유성에 대한 인식을 억압한다는 것이다. ③은 적어도 『자본론』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자체의 범주를 설정한 후 이에 비추어 그것의 형성을 기술한다는 의미이며, ④는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을 우선함으로써 그 이전의 생산양식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⑤는 이미 인식이 시작될 때 인식대상의 발생과정은 보이지 않고 그 결과가 물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으로서 인식이 사회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담고 있는 구체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해 보면 모든 생산양식에 대한 분석이 그것의 고유성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자본주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그것은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살핌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물화된 사회관계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으로 가능하다. 나아가서 과거의 사회구성체는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파악될 수 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인식방법은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물신성으로 억압된다.

위의 논의에 비추어 사용가치가 출발점이 되지 않는 이유를 추측해 보면 우선 사용가치의 생산과 소비는 생산양식과 무관한 인간의 보편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파악에 핵심이 되는 그것의 고유성 내지 사회관계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단 사용가치라는 보편적인 존재에서 출발하게 되면 역사적 과정에 대한 논의로써 상품이라는 범주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끝으로 자본주의에는 사용가치로 논의를 시작케 해서 자본주의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이념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가치가 아니라 상품이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⁶⁾

2. 가치실체에서 사용가치가 배제되는 이유

가치의 실체를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개별 사용가치가 자연적인 속성에 의해서 규정되어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치라는 동질적인 실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6) 단편적인 근거로는 스미스 이래 경제학내에서의 전통으로서 경제에 대한 분석이 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맑스에 있어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다만 스미스등에 있어서 국가를 단위로 한 富, 즉 國富가 분석대상이 되는 데 비해 맑스의 경우에는 자본주의로 생산양식이 바뀌면서 정치적인 영역이 경제적인 영역에 의해 압도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보다는 사회를 단위로 하는 富의 분석이 중심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요강』 p. 42).

- p. 36 “일견 교환가치는 한 종류의 사용가치가 다른 종류의 사용가치와 교환 되는 비율, 양적인 관계로 나타난다. …… 그래서 교환가치는 순전히 우연적이고 상대적인 것처럼 보인다.”
- p. 37 “…… 그러므로 이런 제삼의 것으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
- p. 38 “그래서 만약 우리가 상품의 사용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품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속성만이 남게 되는데 그것이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가치실체론에서 과연 사용가치가 배제되고 있는 것인지는 일견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상품이 사용가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섭하고 있는 보다 발전된 범주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사용가치가 비록 자본주의에만 고유한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에도 있는 보편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가치가 진정으로 배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논의의 대상이 아닐 뿐 계속 전제되어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⁷⁾ 이에 대한 논의는 추상·구체노동의 구분이 갖는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다.

‘배제’되었다면 사용가치가 형태론에서 직접 논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가치에 대한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의 논의 결과를 전제로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제’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비록 형태론에서 본격적으로 사용가치가 논의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가치에 대한 여타 논의에 의존해 계속 고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배제되었다면 1장의 추상수준에서 상품의 가치는 사용가치와 전혀 무관한 것이 되며 전제되었다면 사용가치로 이미 인정되어 있는 것이 된다. 어떤 것이 보다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판정해 본다면 ‘배제’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우선 방법론상으로 생산양식 혹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그것의 고유성 내지 종별성이 먼저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맑스의 입장이라고 볼 때 가치와 사용가치는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상품의 두 가지 요소라기보다는 가치가 사용가치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판』에서 서로 대등하게 취급되던 가치와 사용가치가 『자본론』에서는 가치의 우위로 바뀌게 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제된다고 볼 경우 그것의 여파는 가치형태론에까지 이르러 파괴적인 효과를 낳게 된다. 교환등식($xA = yB$)에서 ‘A’의 가치가 ‘B’의 사용가치에 표현될 뿐만 아니라 ‘A’의 사용가치가 ‘B’의 사용가치에 표현되는 꼴이 된다. 나중에 설명되는 대로 이것은 商品物神崇拜에 스스로 휘말

7) 뵘바베르크는 교환에 있어서 동질적 요소의 존재는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나 이것이 반드시 무하된 노동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사용가치와 연관되는 ‘사회적 사용가치’ 혹은 ‘추상적 사용가치’라는 개념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맑스를 비판했다. 뵘바베르크의 비판이 실체론 그 자체의 이론적인 전개와 관련된 것인 데 비해 본고의 논의는 이와는 달리 실체와 형태 간의 연관을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리는 결과를 가져와 형태론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형태론에서 사용가치는 논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제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위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사용가치를 가치실체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단지 실체에 대한 규명에 관련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치형태 및 화폐에 대한 규명에 있어서 물신숭배를 벗어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된다.

3. 가치형태로서 사용가치가 복원되는 이유

실체가 형태와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맑스의 주장이 가치형태론의 전제가 되어 가치는 사용가치에 필연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사용가치는 가치의 필연적인 표현수단이 된다.⁸⁾

p. 47 “사실 우리는 교환가치 혹은 상품의 교환관계에서 출발해서 그 배후에 놓여 있는 가치에 도달하려고 했다. 이제 우리는 가치가 처음 우리에게 등장했던 바로 이 형태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보다 자세히 보면 형태론에서는 사회적 실체로서의 가치가 사회적 형태를 띄고 있는 사용가치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즉, 자연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욕구의 대상이 되는 구체물이라고 보면 사용가치가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으나 구체적形象에 가치표현이라는 사회적 기능이 부과되면서 사회적 성격을 갖게 된다. 감각으로 포착될 수 없는 모든 실체에 대해 표현하는 경우 그것의 표현수단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일반론에 비추어 볼 때 가치의 표현수단인 화폐도 구체적인 물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그것이 반드시 물체가 아니라 사용가치이며 단지 사용가치일 뿐만 아니라 상품의 물적 기반인 사용가치라고 하는 것은 맑스에게만 고유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품화폐론을 통해 화폐의 기능이 물체에 부여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 물체가 상품이기에 때문에 화폐가 사회관계에서 내생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밝혀 자본주의 사회·생산관계가 물화되어 화폐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셈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화폐가 자연적 속성에 의해서 규정되는 물체에 불과하다고 보는 물신숭배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연하건대 비록 논의의 직접적인 대상은 교환관계이지만⁹⁾ 그러한 교환관계가 그 자체로서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생산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맑스가 생각하는 사회관계가 노동과 생산과정을 배후에 두고 있는 교환관계라고 규정할 수 있을

8) 여기서 언급된 가치실체의 추상과 이에 근저한 가치형태의 필연성에 관한 논증은 「비판」에서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서 「비판」과 「자본론」 간에 상당한 차이를 낳는다.

9) ‘교환관계’라는 표현은 「비판」(p. 76)의 “sondern aus den Austauschverhältnissen von Menschen” 등에서 따온 것이다.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일반적으로 맑스가 상품생산사회의 사회관계가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형성 내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의지, 의도 및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립적으로 운동한다는 유물론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⁰⁾ 이 때문에 형태론에서는 상품소유자들 대신에 상품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형성하며 주체적으로 교환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품들 자신의 내적 필요에 따라 화폐가 발생하며 화폐의 역할을 맡는 상품의 선택도 상품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 p. 52 “.....자신만의 능숙한 언어, 즉 상품의 언어로 자신의 사고를.....”
- p. 62 “.....상품세계의 수없이 많은 다른 구성원들.....”
- p. 63 “상품의 전체 세계와..... 하나의 상품으로서 그것은 이 세계의 시민이다.”
- p. 67 “.....다른 모든 상품들이 그것을 표현 수단으로 만들기 때문에.....”
- p. 83 “만약 상품들 스스로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앞서 논의된 사용가치의 배제와 가치형태론의 관계에 대해 2장을 참고로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해 보자. 이미 언급된 대로 1장의 1~3절에서 교환이 상품간의 擬人化된 관계로 설정되어 있거나 2장에서처럼 상품소유자가 등장하더라도 상품관계에 따라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집행자로 설정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은 사용가치와 사용가치를 욕망의 대상으로 하는 상품소유자가 성급하게 등장하는 경우 소유자들이 상호 합의에 따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화폐 기능에 합당한 자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특정 사용가치를 선택함으로써 화폐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연하자면 형태론에서는 교환이 이와 같이 상품간의 의인화된 관계로 설정되어 있어 특정 사용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물신숭배적인 화폐론을 배제할 수 있다. 또한 정작 사용가치와 경제 주체를 부각시켜야 하는 2장의 교환과정론에서조차 상품소유자들이 본능적으로 상품의 의지를 대신 이행하여 특정 상품으로 하여금 화폐의 구실을 독점케 한다는 주장이나 상품 그 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용가치 내지 구체성에 대해 상품의 소유자가 관심을 기울인다는 맑스의 언술도 물신숭배적인 화폐관을 회피하려는 맑스의 목표로 해명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실체론에서 사용가치가 배제되어야 하는 이유도 확인된다. 끝으로 이런 해석에 따른다면 사용가치와 가치의 사회적 성격이 뒤섞여 있거나 양자가 동등하게 취급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비판』의 교환론이 『자본론』에 이르러 가치를 위주로 한 형태론과 사용가치와 상품소유자의 도입을 위한 과정론으로 분리되고 형태론을 과정론 10) 이런 맑스의 견해는 『독일이념』(예를 들어, p. 26)에서 추상적으로 선언되고 『학설사』의 중농주의 비판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학설사』 1권, p. 44).

론보다 우위에 놓는 방식으로 변동된 것도 해명할 수 있다.¹¹⁾ 또한 과정론에서 취급되는 사용가치의 인정문제는 형태론에 추가되는 형식이 되어 과정론이 형태론에 일반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성립하는 셈이다.¹²⁾ 이에 대한 문헌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pp. 84~85 “상품은 물건이다…… 사람들은 상호간에 상품의 대표자, 그러므로 상품의 소유자로서 존재한다…… 경제라는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경제관계의 의인화에 불과하다.”

p. 85 “소유자가 상품이 결여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구체성에 대한 감각을 보충해 준다…….”

p. 86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생각하기 전에 행동했고 거론했다. 상품의 본성이 부과한 법칙을 본능적으로 준수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상품들의 사회적인 행동……”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자면 사용가치가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자본주의의 고유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상품으로 논의를 시작한 후 사용가치가 인간의 보편적인 활동과 연관된 것이며 자연적 속성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가치라는 동질적 실체에서 배제되고 사회관계의 물화로서 가치형태가 사용가치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사용가치가 미리 개입되는 경우 상품물신숭배에 의해서 상품 및 화폐를 자본주의에 고유한 사회관계로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상품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가치실체에서 사용가치·구체노동을 배제하여 가치·추상노동으로 구성케 하며 가치형태에서 사용가치·구체노동을 복원하는 것은 맑스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사적·사회적 노동의 구분과 이질적인 관계를 빚어낸다 하더라도 전 체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맑스가 사용가치·가치의 구분과 구체·추상노동의 구분을 포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11) 사용가치가 가치실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면서 그것에 대해 객관적인 물체로서 집착하는 로셔(W. Roscher)등의 역사학과(『비판』 p. 16 각주)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한계효용학과적인 발상이 기각된다. 실체를 노동가치로 규정하면서 고전학파(혹은 리카아도)와 공통점을 지니게 되나 실체와 형태의 필연적 관계를 주장하면서 가치형태론을 주장하면서 고전학파와 결별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대로 실체와 형태의 필연적 관계가 제대로 성취되지 못했다면 그것의 논리적 파급은 양자의 분리로서 실체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고전학파적인 무하노동가치론, 형태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프랑스의 이단적 학파, 그리고 양자의 중간에 놓여 있는 추상노동학파의 분해를 낳게 될 것이다. 또한 신리카아도학파의 경우에는 맑스가 실체와 형태를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양자 모두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끝으로 신고전학파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뵘바베르크가 맑스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사용가치의 배제를 물고 늘어진 것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12) 만약 『비판』의 흐름을 따르거나 앞선 논의에서 사용가치가 전제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면 형태론에서 사용가치와 함께 가치가 표현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형태론과 과정론은 상호 의존하게 되는 셈이다.

Ⅲ. 私的·社會的 勞動이 等價形態와 관련하여 언급되어야 하는 이유

등가형태의 논의에서 사적 노동과 사회적 노동의 구분이 언급된 것은 그 이전까지의 내적인 논리전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 삽입되었다는 인상이 강하게 든다.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투입되는 것인지 그다지 분명치 않으나 아마도 맑스가 자본주의의 두 가지 고유성으로 지적한 생산의 무정부성과 노자관계에 기반을 둔 착취 중 전자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해 본다.¹³⁾ 이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pp. 72~73 “사용의 대상물들은 단지 상호 독자적으로 영위되는 사적인 노동의 산물이라는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품이 된다. 이런 사적인 노동들의 복합체가 사회적인 전체노동을 구성한다. …… 혹은 사적인 노동들은 비로소 이들 관계를 통해서만 사회적인 전체노동의 부분들로서 사실상 기능하기 때문이다.”

pp. 94~95 각주 1 “……왜 화폐가 직접 노동시간을 대표하지 않는가?…… 상품의 형태는 상품이 상품과 화폐로 분화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혹은 왜 사적인 노동이…… 그것의 반대인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노동이 될 수 없는가?…… 오랜 상품생산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생산형태인 직접적으로 연합된 노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생산의 무정부성에 대해서는 1장 4절 상품물신숭배론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되고 있는데 맑스가 논의한 것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모든 생산물이 상품화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교환과정에서 생산물이 가치와 유용성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생산자가 경제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생산자는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노동한 결과인 생산물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매개된다. 인간의 관계가 이와 같이 생산물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매개되기 때문에 자본주의하에서 인간의 사회관계는 물건들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오인된다. 물건의 속성은 자연적인 것이고 영구불변한 것이므로 자본주의의 인간관계 혹은 사회관계가 영구불변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의 행동 및 인식의 주체들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일시적인 혹은 역사적

13) p. 170의 각주에서 두 가지 고유성은 보편적인 상품생산과 노동력의 매매이며 양자가 동일한 것이라 맑스는 주장하였다. 여기서는 이들의 동일성이 자명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전자를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해석한 것이다.

인 성격을 부인하는 ‘부르주아’적인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맑스의 이와 같은 상품물신론은 자본주의의 고유성 및 역사성을 부인하는 경제주체 및 경제학자들의 오류를 자본주의라는 생산양식의 고유성 그 자체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인식에 대해 유물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스 고유의 이념론을 구성하고 있다. 분해해 보자면 4절의 상품물신론은 생산의 무정부성이라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고유성과 그러한 고유성이 재생산하는 인식상의 오류로서 자본주의의 역사성에 대한 부인이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자는 형태론 그 자체가 아니라 맑스의 인식론 내지 방법론으로서 『자본론』의 구성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미 언급된 대로 형태론 뿐만 아니라 가치론 전체에 삼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현상 그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자본론』이나 『학설사』에서 비로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강조되어 온 것이다. 사적·사회적 노동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전자인데 이 부분이 형태론에 삽입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전자만을 보다 자세하게 논의해 보자. 그 내용은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상품생산사회인 자본주의하에서는 사적 노동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노동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 社會的 承認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사회적 노동이 된다는 것, 혹은 모든 개별 생산자가 시장에서 판매할 것을 목표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자간의 인간관계 및 사회적 노동의 참여자라는 성격이 상품이라는 물체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정할 수 있는 화폐란 직접적으로는 상품을, 간접적으로는 여기에 체현된 사적 노동을 사회적으로 승인하는 역할을 맡은 존재가 된다. 이것은 화폐가 상품생산과 같이 자본주의에 고유한 것이라는 위의 인용귀에서도 확인된다. 이렇게 될 때만 화폐는—화폐의 일반적인 요건으로—상품생산사회의 모든 구체적인 상황으로 인한 가치의 실현여부 및 정도를 包攝하는 가장 表皮인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등가형태가 화폐형태의 초보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등가형태와 관련된 논의에서 사적·사회적 노동의 구분이 언급된 것은 화폐가 생산의 무정부성이라는 자본주의의 고유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논리를 ‘삽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형태론이 아니라 과정론에서 이것이 언급될 수도 있었을 것이나 방법론적으로 볼 때 과정론에서는 자본주의 고유의 화폐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상황이 겹쳐지면서 발생하는 화폐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생산의 무정부성이라는 固有性을 담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IV. 들출성 내지 이질성에 대한 일차적인 해명

이제 사적·사회적 노동의 구분이 구체·추상 노동의 구분과 동일한 체계내에 묶여 있을 수가 없는 직접적인 이유를 제시해 보자. 결론부터 제시한다면 이미 논의된 대로 구체·추상 노동의 구분이 교환의 한쪽 극에서 사용가치를 배제하는 비대칭성에 의존하고 있는 데 반해 앞으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사적·사회적 노동의 구분은 이것과 무관하며 교환의 兩極에 있어서 공히 사용가치 내지 노동생산물로서의 대상성을 적극적으로 등장시키기 때문이다.

우선 사적·사회적 노동의 구분이 사용가치의 배제 내지 양극화와 '무관'한 이유는 이 구분이 사용가치의 배제 여부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하에서 나타나는 노동의 사회적 성격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하에서는 다른 생산양식에서와는 달리 교환의 필연성 때문에 노동의 결과에 의해서 노동이 매개된다는 것이다. 즉, 추상노동과 구체노동의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 노동이 가치와 사용가치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상품=노동결과의 사회적 성격에 의해서 매개된다는 것이다. 사적·사회적 노동의 구분은 개별생산자의 판단에 따른 유용성 및 사적 노동이나 아니면 사회적 유용성의 유무 및 사회적으로 인정된 노동이나에 따른 것이므로 사용가치·구체노동과 가치·추상노동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되어 있다. 달리 표현하면 추상·구체노동의 구분에서는 이미 노동의 결과로 나타난 상품의 두 가지 요소로서 가치와 사용가치에 대한 구분이 중요한 것인 데 비해 사적·사회적 노동의 구분에서는 노동이라는 활동과 노동의 결과가 구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용가치·具體勞動의 배제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사용가치를 '수용'한다는 것은 그 이전의 가치실체론이 사용가치(와 소유자)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데 비해 私的·社會的 勞動에 대한 구분은 사용가치에 대한 社會的 認定과 사회적 성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사용가치의 의미와 사회적 성격에 대한 규정이 각각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전자에 있어서 사용가치는 사회적 실체를 표현해 준다는 사회적 성격을 부여받는 데 비해 후자에 있어서는 사용가치의 유용성 자체에 사회적 성격이 부여되고 그것이 노동의 체현이라는 성격이 강조되며 분업적인 노동을 매개한다는 사회적 성격이 부여되고 있다.

1) 사용가치의 일차적인 사회적 성격으로 4절에서 도입되고 있는 것은 욕망의 대상으로서 시장에서 수요된다는 것이다.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하여 사적 노동과 사회적 노동 간에 모순이 존재하며 시장에서 이 모순이 해소되면서 재생산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특정 부문내에서 개별 생산자간에 존재하는 생산조건상의 차이로 발생하는 가치량 혹은 투하된 추상노동량에 대한 차별적인 인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의 부정부성으로 인한 자본주의 분업체계의 동태성 및 생산 요소의 이동성으로 상품의 사용가치 혹은 체현된 구체적 노동에 대한 인정여부도 개입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의미에 있어서 사용가치가 갖는 사회적 성격은 개인의 인류학적 욕구 및 소비라는 보편적인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자본주의 고유의 사회적 성격이 박약하므로 1~3절에서는 맑스가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그런데 4절에서 사용가치는 이것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적 성격도 갖게 된다. 이미 언급된 것을 반복하자면 상품생산사회에서 사용가치는 노동의 결과 이면서 반드시 교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의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분업관계를 사용가치 내지 상품이 媒介해 준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노동의 결과로서 사용가치는 생산자들의 사회분업적 노동을 매개한다는 새로운 사회성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4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가치의 표현수단이라는 사회적 기능과 분업적인 노동의 매개물이라는 사회적 기능이 공히 교환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상품이라는 동일한 규정의 두 가지 측면으로 상징되는 셈이다. 그러나 사용가치의 이런 사회성은 사용가치의 유용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사회성 뿐만 아니라 형태론과 관련하여 부가된 가치표현의 수단이라는 社會性과도 구분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형태론과 상품물신론의 차이를 논해 보자.

첫째, 형태론에서는 사용가치가 주로 자연적인 속성에 의해 규정되는 소비의 대상으로 구체성을 띄는 것인 데 반해 물신론에서는 노동이라는 인간의 활동이 노동의 대상에 고착되어 구체적인 물체로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각각에 있어서 구체성의 의미가 다른 것이다.¹⁴⁾ 형태론과 상품물신론 모두에 있어 상품이 교환의 대상이라는 것과 노동의 체현물이라는 점 및 이들이 분업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고려되고 있지만 전자에 있어서는 노동의 체현물이라는 점이 전제되어 있을 뿐 직접 논의되지 않고 단지 교환의 대상이라는 점과 교환관계가 논의되고 있는 데 비해 후자의 경우에는 노동의 체현이라는 성격과 분업관계가 본격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자에 있어서 소위 사회관계로 통칭되는 것도 내용상 각기 시장

14) 이들은 각기 現象形態와 體現形態로 호칭될 수 있을 것이다. 상대가치형태의 질적 규정과 동가형태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특징을 논하면서 맑스가 이들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자본론』 I권 독일어판 p. 64, 66, 72, 73, 78). 여기서 맑스는 현상과 체현, 혹은 현상형태(Erscheinungsform)와 체현형태(Verwirklichungsform) 사이에 분명히 구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商品物神論의 논의를 예기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여 문제의 돌출성을 맑스가 자신도 모르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인다.

에서의 상품교환관계와 사회적 노동의 분업관계로 차별화된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가치를 갖지 않는 물체도 구체성을 띌 수 있으며 노동의 산물이 아닌 사용가치도 존재한다고 볼 때 이 두 가지 구체성은 동일시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후자에 있어서는 대상성으로 지칭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가치실체·형태간의 필연성이나 자본주의의 생산력에 의존해 모든 사용가치가 노동의 산물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투하노동이 가치를 구성한다는 가치실체론이 유지되어야만 양자간의 等値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가치실체론을 통해 소비의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사용가치는 동시에 노동의 산물이 될 때 사용가치가 갖는 구체성이 노동의 산물이 갖는 대상성과 동일시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등가형태 내지 화폐는 두 가지의 구체성을 포괄하면서 생산과 교환·소비의 양측면을 포괄 내지 연계시키는 존재가 된다. 또한 이로 인해 맑스에 있어서 화폐는 단지 교환과정에서 유통되는 상징이 아니라 그 자체 노동가치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교환의 필연성을 內包하고 있는 존재, 즉 그 자체 상품이어야 한다는 것도 해명된다. 이렇게 본다면 가치실체론은 화폐를 통해 생산과 교환을 연계시키는 또 다른 논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의 화폐는 맑스에 있어서 제대로 설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두 번째 논의를 구성한다.

둘째, 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양자에 있어서 게재되어 있는 구체적 성격이 같다고 보는 경우에도 각각이 발휘하는 사회적 기능이 다르다. 형태론에서 사용가치가 발휘하는 사회적 기능은 사회적 실체인 가치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다는 데 있는 데 비해 상품물신론에 있어서 사용가치 내지 노동생산물이 생산자들의 사회적 분업적인 노동을 매개한다는 사회적 성격을 갖는다. 전자의 경우 교환과정에서 사용가치의 구체성이 가치실체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한편 가치형태라는 역할을 독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자본주의사회의 고유성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상품생산사회에 있어서 교환의 필연성이다. 전자에 있어 교환동식의 양극에 있는 상품들에게 각기 가치실체의 體現物과 가치형태의 表現物이라는 역할이 분할되면서 양극화된 구조가 설정되고 있다. 이에 반해 후자의 경우 노동성산물의 對象性이 갖는 기능은 자본주의에 고유한 노동의 社會性인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해 사적 노동을 매개하는 것이다. 후자의 교환에 있어서 상품생산사회의 고유성으로 설정되는 것은 상품의 가치가 필연적으로 표현된다는 상품간의 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상품간의 관계가 인간관계 내지 노동의 분업관계를 매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교환에 관련된 두 상품이 노동의 결과로서 갖고 있는 상대성은 각각의 사적 노동이 체현된 결과로서 어느 것 하나 희생될 수 없이 공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양자에 있어서 구체적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차치하는 경우에도 교환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상품에 대해서 각각의 논리에 따라 전자의 경우에

는 교환의 왼쪽 극에만 추상성을 독점케 하고 오른쪽 극에는(사용가치라는 의미에서의) 구체성만이 부각되도록 하는 구조를 가져오는 데 비해 후자의 경우에는 양극에 있어서 공허(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의 구체성 내지 대상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양자에 있어서 인식상의 오류는 모두 상품물신숭배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교환의 필연성으로 인한 가치의 표현수단의 존재가 물체의 천연적 속성으로 오인되는 것인 데 비해 후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노동의 분업상 인간관계가 교환과정에 의해 매개되면서 그러한 노동의 대상화인 물체의 속성으로 오인되는 것이다.¹⁵⁾

위의 논의가 의미하는 바는 구체성 자체의 의미 차이로 인한 모순이 실체론에 의해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성격의 차이 때문에 양자를 한 체계 안에 묶어 놓으려는 경우 필연적으로 균열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등가형태에서 나타나는 이질성의 근원으로 생각된다. 대체로 두 범주간의 관계는 相互排除, 必然的 聯關 아니면 양자의 중간 상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구체·추상의 구분에서는 교환의 일방에서 사용가치가 적극 배제되어야 하는 데 비해 상품물신론의 사적·사회적 노동의 구분에 있어서는 사용가치(혹은 노동생산물의 성격)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자는 상호 배제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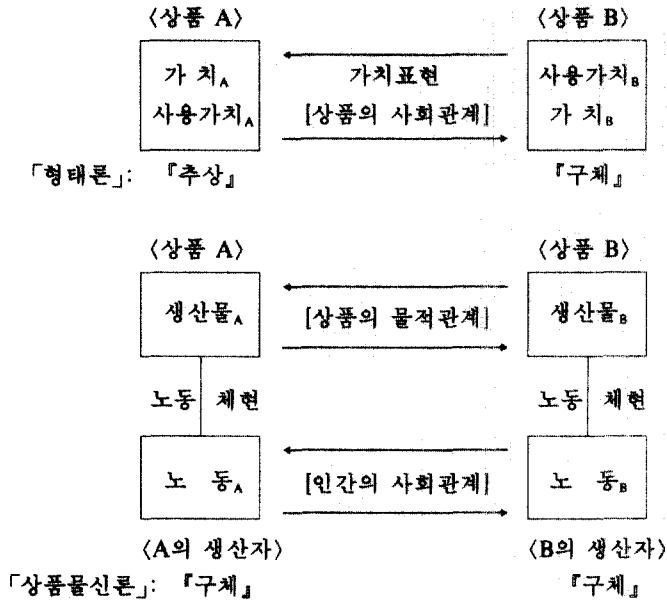
위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형태론에서 사용가치는 욕구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취급되며 사용가치를 배제한 가치실체를 표현해 주는 것이 그것에 부여된 사회적 성격인 데 비해 상품물신론에서는 사용가치가 노동의 체현이라는 측면이 부각되고 사회적 유용성과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의 매개체라는 사회적 성격을 부여받는다. 이로 인해 전자에서는 교환의 한쪽 극에서 사용가치가 배제되고 그것의 대극에서는 사용가치만이 부각되는 양극화가 발생한다. 이에 비해 후자에 있어서는 양극에서 공허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의미에서 구체성이 부각된다. 그러므로 양자를 똑같은 교환 등식에 걸쳐 놓을 때 균열이 발생한다. 그러한 균열로 인해 모두에 제기한 형태론의 돌출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균열을 도표화한다면 <그림 1>과 같을 것이다.

즉, <그림 1>에서 보면 형태론에서는 사용가치로서의 구체가 부각되며 추상·구체(혹은 구체·추상)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 상품물신론에서는 노동생산물로서의 구체와 구체·구체의 구도가 드러난다.

15) 여기서 인간관계라는 용어는 생산관계 내지 사회관계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후자가 계급관계에 의해 흔히 규정되는 데 비해 전자는 교환 내지 분업과 연관된 것으로 개인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의 남용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된 자본주의의 두 가지 고유성을 동일시하기 위한 부담으로 추측되는데 추후의 문제로 삼는다.

16) 예로써, 재생산도식이나 공황론이 노동가치론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나 다른 가치론과도 결합될 수 있다면 이들과 노동가치론 간의 관계는 세 번째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V. 교환의 유형과 방법론을 통한 포괄적인 해명

위의 주장점을 보다 포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맑스가 『자본론』 I권 제1, 2장에서 전개한 논리를 교환의 제반 측면과 이에 연관된 방법론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의에서 주안점이 되는 것은 교환의 각 측면 내지 유형이 어떻게 각 단계의 추상수준과 연관되느냐는 것이다.

1) 교환관계

과정론에 이르기까지 맑스가 제시한 교환의 제반 측면 내지 유형들을 도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전반적으로 사용가치가 배제 내지 사상되었다가 자본주의의 본질을 정립한 후 다시 복원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본론』을 통해 자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우연한 교환」과 「과정론」의 위치를 중심으로 <그림 2>를 설명해 보자.

「우연한 교환」은 사용가치의 소유자들이 다른 사용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수행하는 교환이다. 이 경우 사용가치의 획득만이 교환의 유일한 동기가 된다. 여기서 교환행위는 우연하게 발생하며 교환의 비율도 우연한 정황에 의해서 결정되고 교환의 기초가 되는 분업도 성별 및 연령 등 인간의 자연적인 속성이나 자연환경의 차이에 근거하고 있다(『자본론』 I권 13장). 이러한 유형의 교환은 맑스에 있어서 명

시화되고 있지 않으나 1장 1절에서 교환가치가 우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여기서도 독일어 원문에서는 현상형태라는 표현이 “ ”으로 쌓여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함), 2장의 과정론에서 생산물의 교환에 대해서 언급한 것, 교환의 역사적 발전에서 초기적인 교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나중에 설명되는 방법론상의 보완에서 착안한 것이다.

- p. 36 “일견 교환가치는 한 종류의 사용가치가 다른 종류의 사용가치와 교환되는 비율, 양적인 관계로 나타난다. …… 그래서 교환가치는 순전히 우연적이고 상대적인 것처럼 보인다. …… 일반적으로 교환가치는 단지 표현방식, 현상형태, ……”
- p. 87 “생산물의 직접적인 교환은 한 측면에서는 상대적인 가치표현의 기본 형태를 띠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 x 개의 상품 $A = y$ 개의 상품 B …… x 개의 사용가치 $A = y$ 개의 사용가치 B ……”

2장에 비추어 우연한 교환이 갖는 특징을 요약하자면 상품을 위주로 교환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가치와 사용가치를 욕구하는 개별주체의 주관 및 의지를 배제하며 순수한 상태의 교환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의 일치를 전제로 한 것 등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론』 I권 1장 1절의 논리전개에서 사용가치가 인간의 보편적인 활동과 연관된 것이라며 ‘사용가치 일반’의 배제가 시사되었고 1절의 「가치실체론」에서는 동질적인 실체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하여 ‘개별 사용가치’가 배제되고 투하노동에 의해서 규정되는 가치실체가 유일하게 부각된다. 그런데 3절의 「형태론」에서는 사용가치가 가치표현의 필연적인 수단으로써 사회적인 기능을 띄고 재등장한다. 1~3절에서는 교환이 상품들 사이의 의인화된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4절의 「상품물신론」에서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본연의 기능으로서 ‘사용가치 일반’의 사회적 성격이 상품생산자와 함께 언급되고 있으며 사용가치가 노동의 생산물로서 노동의 교류를 매개해 준다는 사회적인 기능이 사용가치에 추가된다. 인간 욕구의 대상으로서 사용가치 일반의 사회적인 성격이 부활된 것은 1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끝으로 「과정론」에서는 ‘개별 사용가치’가 상품소유자와 함께 다시 복원되고 있어 「가치실체론」과 대칭을 이루고 있다. 또한 「과정론」은 「상품물신론」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사용가치가 아니라 노동 생산물이며 상품이라는 점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우연한 교환에서나 과정론의 교환에서나 사용가치의 획득이 부각되고 있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교환이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데 비해 후자의 경우에는 가치가 전제로 되어 있어 교환의 성격이

필연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상품물신론과의 대비에서 이미 나타난 문제의 이질성은 교환과정론과의 대비 속에서 더욱 확연해진다. 그런데 「과정론」의 위치를 보다 공고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논의가 요구된다.

형태론의 결론이 되는 가치형태=「화폐형태」와 상품물신론의 시작이 되는 「상품형태」 그리고 형태론의 끝에 “ 「표시로 싸여 등장하고 화폐론에서 언급되는 「價格形態」 간의 일견 애매한 차이에 주목하면서 위의 관계를 재조명해 보자(p. 54, p. 102).

우선 상품의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로서 가치론의 출발점이 되었던 「교환가치」는 교환의 양적인 측면과 주로 연관된 것이며 비율 결정의 우연성이라는 오류가 수반되어 있는 개념인데 이러한 교환가치 개념의 왜소성과 오류를 가치실체의 본질을 매개로 극복함으로써 실체의 필연적 형태로 재정립한 과학적으로 올바른 개념이 「화폐형태」이다. 이에 비해 「가격형태」는 생산의 무정부성을 발현해 주는 것으로 시장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과학자인 맑스의 입장에서는 법칙성을 가지고 있지만 개별 주체가 관찰하는 바로는 우연히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 물신성을 조장하는 가격이다. 이것은 대체로 시장가격에 해당되며 과정론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품형태」는 형태론에 근거한 화폐와 가격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맑스가 설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교환가치가 가치형태로 재정립되는 것과 유사하게 역시 출발점이었던 상품도 상품형태로 다시 규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교환가치가 가치형태로 정립된 것이 가치론을 마무리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가치·가격은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이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논리적 발전이 의미하는 바는 「교환가치」라는 비과학적 표현내에 가치실체 이외에도 「화폐형태」와 「가격형태」라는 두 가지 개념이 혼합되어 있는데 이것을 맑스가 분리해낸 후 다시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개념간의 차이는 후자가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하다는 점, 개별 주체 및 사용가치의 등장과 같은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맑스의 입장에서 볼 때 개별 주체는 물신성 때문에 자본주의의 고유성 및 가치형태, 심지어 가치실체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 등이다.¹⁷⁾ 다시 말해, 맑스는 화폐형태와 가격형태를 과학자로서 자신이 인식한 가격과 여기에 시장의 존재로 인한 구체적 상황이 개재된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양자를 연결하는 「고리」가 상품형태가 되며 화폐형태→상품형태→가격형태의 연결과 이에 상응하는 가치형태론→상품물신론→교환과정론의 연결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화폐형태와 가격형태를 모두 상품생산사회의 특수성에 포괄하고 있다. 「형태론과 관련하여 內在化된 교환의 存在 및 가치表現의

17) 고전경제학과 속류경제학은 모두 가치형태 및 자본주의의 고유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으며 고전경제학의 경우에는 가치실체를 불완전하나마 파악하고 있으나 속류경제학은 이것마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맑스의 입장이다.

必然性」과 「상품물신론과 관련하여 제시한 생산의 무정부성」(및 교환과정론)은 서로 결합되기 힘든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주장이었는데 양자가 각기 화폐형태와 가격형태로 연결될 수 있다면 위에서 나타난 두 가지 형태간의 간극은 본고의 주장을 달리 표현한데 불과하다.

위의 전반적인 논의에 비추어 볼 때 본고의 주장점인 형태론과 상품물신론 간의 이질성은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교환과 화폐를 논의하기 위해 일단 배제되었던 사용가치와 상품의 소유자들을 복원시키려는 맑스의 논리전개가 형태론에서 상품물신론이나 과정론으로 이어지면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방법론

교환유형에서 「우연한 교환」이 설정된 것과 유사하게 방법론적인 재구성이 가능하다. 가치론을 중심으로 맑스의 논리 전개과정을 보면 주지의 왕복운동 외에 관찰의 대상으로 이어지는 구체화의 과정이 있으며 그것의 대극에 일차적인 관찰의 대상으로서의 구체로부터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구체에 접근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만약 맑스가 진정으로 전체주의적인 유물론을 지향한다면 마땅히 이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 설정이나 발견의 과정에 대해서 多様性이나 不可知論을 인정하게 되어 베버(M. Weber)의 價値聯關(Wertbeziehung)이나 포퍼(K. R. Popper)적인 批判的 合理主義의 多元論에 빠지게 될 것인데 이것은 단연코 非맑스의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적어도 「자본론」, 「학설사」 및 『비판』에서는 맑스가 이에 대해 명시화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요강』의 방법론 논의 중 “경제에 대한 분석이 시작된 후 고전경제학에 이를 때까지 경제학이 밟아온 추상화의 경로”로서 맑스가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적한 것이 바로 이 과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pp. 34~35). 특히 가격과 교환가치가 구체와 추상의 범주로 각기 분류되어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비어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교환관계와 연관된 맑스의 인식방법을 도식화한다면 <표 1>과 같을 것이다. 이것은 위에서 논의된 교환의 유형에 대체로 상응하는 것이지만 물신론이 형태론과 과정론의 과도적인 매개로 독자적인 추상수준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생략한 것이 다르다.

<표 1>을 가치·가격문제와 관련하여 설명하자면 ①의 구체는 관찰되는 그대로의 교환으로서 수요·공급상 차이의 배제등 교환을 순수한 상태에서 보려는 최소한의 추상화도 이루어지지 않아 교환의 비율도 우연히 결정되어 어떤 법칙성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수준에서는 물체에 의해서 인간과 인간의 노동이 평가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품물신적인 오인이 지배적이다.

〈표 1〉

교환의 유형	우연한 교환 (가격)	가치실체론 의 출발 (교환가치)	가치실체론 의 귀결 (가치실체)	형태론 (가치형태)	과정론 (가격형태)
추상의 수준	구체 ① 관찰의 대상	구체 ② 인식의 대상	추상 ③ 본 질	구체 ④ 인식대상의 재정립	구체 ⑤ 관찰대상의 재정립

가격이 노동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교환비율의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고전 경제학이 성립되기 이전의 초기 경제학의 상태 및 (아마도) 속류경제학의 인식상태, 그리고 자본가 및 의식화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 ①이 설정될 수 있는 근거를 종합해 보면 앞서 언급된 대로 우연한 교환이 상당한 전거를 갖고 있다는 것, 구체 ⑤가 언급되고 있다면 ②-③-④의 왕복운동을 포섭하는 보다 큰 왕복운동이 있어야 할 것이며¹⁸⁾ 구체 ⑤의 對極이 이러한 출발점으로서 요구된다는 것, 그리고 이와 연관된 것으로서 맑스를 누구라도 처음부터 상품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는 것에 착안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짐작, 그리고 맑스가 『요강』에서 가격과 교환가치를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이에 비해서 ②의 구체는 현상이 관조나 관찰의 대상에서 인식의 대상 내지 원료로¹⁹⁾ 변화된 것으로 가격이 교환가치로 설정된 것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현상을 순수한 상태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가정들이 도입된다고 볼 수 있다. 교환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일치된다고 본 것 등이 이에 속한다(p. 52). 이것에 근거해 비로소 이론화 내지 추상화 작업이 시작된다. ③의 추상화가 완료되면 가치의 실체가 설정되고 이에 근거해서 다시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구체를 재설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설정된 ④의 구체는 ②의 구체를 추상화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인식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서 교환가치가 가치형태로 정립된다. ②, ③, 그리고 ④에서 교환은 상품

18) 부연하자면 맑스에 있어서는 구체-추상-구체의 왕복이 인식운동의 기본을 이루지만 일단 기본 범주가 설정된 이후에도 이것을 내적인 논리전개로 발전시키면서 보다 발전된 경제관계에 상응하는 복잡한 범주를 도출하는 작업이 있으며(가령, 화폐에서 자본으로의 전화 같은) 구체라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가령, 가치에서 생산가격으로의 전형, 그리고 생산가격과 시장가격 간의 관계). 맑스가 『확실사』에서 리카아도에 轉形論이 결여된 것을 두고 ‘중간고리(essential links; Mittelglieder)의 결여’로 규정할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왕복운동에 대해서는 Kojève [5], p. 119의 도표가 지극히 시사적이다. 특히 큰 원과 작은 원의 결합 및 완전한 원과 불완전한 원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플라톤, 칸트, 그리고 헤겔의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19) 이 점에서 맑스의 인식론에 대한 알튀세르(L. Althusser) [4]의 설명(pp. 46~50)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간의 관계로 설정된다. ⑤의 구체는 관조의 대상이 되는 가장 구체적인 현상을 이론의 틀 속에 포섭함으로써 가능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론 자체가 보다 구체화될 뿐만 아니라 인식 및 오인에 대한 유평론적인 해명이 병행된다. 여기서 시장가격은 가치에 근거한 필연적인 존재 혹은 가격형태가 된다. 또한 개별 경제주체들과 속류 경제학자들이 시장가격을 이와 같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해명된다.²⁰⁾ 나아가서 교환은 단지 상품들 사이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사용가치를 추구하는 상품소유자와 생산자 간의 관계이기도 하다. 만약 교환을 사용가치와 상품소유자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경우 인식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채 ①에 머물게 되는 데 비해 맑스의 논리를 수락한다면 ⑤에 이르게 된다.²¹⁾

추상·구체노동의 구분과 사적·사회적 노동의 구분이 갖고 있는 이질성이 본고의 핵심인데 이것을 방법론적으로 확장시켜 해명해 보면 구체 ④에서 구체 ⑤로 넘어가는 과정에 암초가 걸려 있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일단 설정된 인식대상으로서의 구체에서 추상으로 내려갔다가 인식대상으로서의 구체로 복귀한 후 다시 관찰 내지 관조의 대상으로서의 具體로까지 이행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²⁾ ④에서 ⑤로 넘어가는 과정이 순조롭지 못

20) 시장가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자본의 개입으로 인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자본 및 개별자본이 개입될 경우를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구체적인 것으로서 별도의 추상수준을 부여하느냐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별도의 추상수준을 부여할 경우 ⑤의 구체내에서 또 다른 추상수준의 구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복잡성이 야기 된다. 이것은 시장가치 내지 사회적 가치를 생산가격과 동일한 차원으로 놓을 것이냐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의 논의 사항으로 남겨 놓으며 일단 시장가치와 생산가격이 동일한 차원이라고 본다.

21) 포퍼, 그리고 포퍼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신고전학파적인 접근방법과 맑스의 방법론적인 입장을 위의 도식에 근거해서 비교함으로써 맑스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부각시켜 보자 (참고 [1] 참조, pp. 232~234).

첫째로 맑스에 있어서는 ①에서 ②, 그리고 ③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필연성을 부여하고 있는 데 비해 포퍼는 이와 같은 필연성을 ‘과학적인 발견의 논리’(logic of scientific discovery)로 간주하여 부인한다. 포퍼는 이 부분을 계급의식등 어떤 지식 사회학적인 근거에 따라 설명하려는 시도를 일체 부정하면서 이것을 미지의 상태로 남겨 두어 가설(hypothesis)제기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맑스에 있어서는 ④나 ⑤와 같은 구체화의 과정이 필연적인 것이며 모든 구체성을 포용하는 것이어야 하는 데 비해 포퍼에 있어서는 이런 과정이 가설의 반증(falsification)과정으로 설정되어 필연성 대신 다양성을 강조하고 끝까지 해명되지 않는 부분을 남겨 두고 있다. 계량경제학의 ‘잔차항’(residual)이 갖는 철학적인 의미도 결국 인식대상에 대한 완벽한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맑스에 있어서는 논리의 발전이 ‘단계’라는 질적인 변동을 의미하는 데 비해서 포퍼에 있어서는 이것이 연속적인 양적 발전으로 상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흔히 멩저(C. Menger)나 미세스(L. Mises)가 주장하는 “지속적인 근접”(successive approximation)의 방법은 포퍼류나 신고전학파적인 접근방법에 가까운 것이다.

22)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전형론이나 경쟁론이 노동가치와 제대로 결합된 것인지 논할 경우 기존 논의에서처럼 단지 양자간의 양적인 일치를 점검하는 방법 이외에도 논리전개상 불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또 다른 비판점으로 지적할 수 있게 된다.

한 것은 관찰 대상으로서 구체 ①에서 인식대상으로서 구체 ②로 이행한 과정 내지 근거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①에서 ②로 이행하면서 발생한 것을 지적하자면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담고 있다는 주장하에 상품을 위주로 교환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가치와 사용가치를 욕구하는 개별주체의 주관 및 의지를 배제하며 순수한 상태의 교환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의 일치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속류경제학, 19세기 말의 한계효용학파, 그리고 현대의 신고전학파에 대한 배제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러한 맑스의 방법론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II의 논의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해될 수 있다.²³⁾

VI. 화폐론과의 연계

화폐론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화폐론에서 맑스가 주장하려는 점들과 가치론의 문제점들이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보는 것이 주안점이다. 본고의 추측은 가치론에서 발생하는 이질성이 화폐론의 논리전개를 위해 요구되는 것을 '삼입'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가치실체론과 화폐론을 연결시키는 고리로서 가치형태론이 설정되고 이에 근거해 보다 구체적인 교환과 자본을 해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논거를 제시해 보자.

맑스의 화폐론은 중상주의와 고전학파의 화폐관이 모두 나름대로 일면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중상주의는 화폐 그 자체에 집착함으로써 자본주의하에서 가치획득이 유통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으며 흙 및 고전학파에 있어서는 반대로 화폐의 유통에만 집착해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 화폐가 갖는 의미를 무시했다. 전자는 화폐가 가치저장의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일방적으로 집착함으로써 이것이 유통 내지 순환과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데 비해 후자는 유통과정을 일방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화폐가 경제관계의 '필연적인 물화'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양자의 일면성을 비판한 맑스는 화폐를 순환을 내포하면서도 경제적인 관계를 구체화하고 있는 존재로 설정하게 된다. 맑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C-M-C$ 와 $M-C-M$ 에 근거해 자본이라는 개념도 전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설정이 필연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는 화폐'(Geld als Geld)가 바로 자본회로의 기초가 된다고 볼 때 화폐를 금·은 등의 자연적 속성으로 환원시키려는 상품물신성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자본개념의

23) 교환 및 가치와 관련된 이와 같은 추상수준의 단계는 자본의 개념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된다. 이에 대해서는 보론에서 논의하고 있다.

기초가 되는 '그 자체로서의 화폐'라는 개념을 설정한다는 목표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것이다. 그런데 가치형태론은 화폐가 물체이면서도 단순히 물체가 아니라 교환 및 경제관계의 필연적인 산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화폐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형태론은 단지 상품을 출발점으로 한 가치론 논의의 자연스런 진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화폐론에 의해서도 추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이미 언급된 것으로 『비판』에서 『자본론』으로 넘어오면서 가치형태론이 강화되고 『비판』에서 혼합되어 있던 교환론이 『자본론』에서 형태론과 과정론으로 구분되어 상품화폐를 확고하게 설정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그 자체로서의 화폐'가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화폐의 다섯 가지 기능들 중 그 자체로서의 화폐로 대별되는 세 가지 기능뿐만 아니라 가치척도의 기능, 그리고 심지어는 유통수단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그 근원이 상품화폐였음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유통수단 및 지불수단의 기능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각종 공황의 가능성이 상품론 및 형태론에서 전개된 사용가치·가치 등의 모순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생산의 무정부성이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상품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화폐의 기능이 간과될 수 없으며 이 점에서 유통수단으로서 기능을 축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사적·사회적 노동의 구분이 이같이 화폐의 필연적인 요소로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치형태론의 전반적인 논리적 흐름에 압도되면서도 화폐론과 등가형태와 관련하여 삼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p. 114 사용가치와 가치의 모순 ; 사적 노동이 직접적인 사회적 노동으로 등
장해야 한다는 모순, 특정의 구체적인 노동이 추상적인 인간의 노동으로
통해야 한다는 모순 ; 물체의 인간화와 인간이 물체에 의해서 대표
 되는 것 간의 모순 ; 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모든 모순과 대립……
 (밑줄은 논자)

VII. 이론 및 현실적 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수정이 요구되는지 살펴봄으로써 본고의 주장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 개진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맑스에 있어서 화폐는 생산의 무정부성이라는 자본주의의 고유성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반영하는 사적·사회적 노동의 구분이 형태론에 의해서 수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증거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태론에서는 교환의 양극에 '추상'-'구체'가 놓여 있는 데 비해 생산의 무정부성이 요구하는 것은 '구체'-'구체'의 구도이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양자에 있어서 공히 '구체'의 의미가 같아야 하며, 둘째 양자 모두 '구체'-'구체'가 되든가 아니면 '추상'-'구체'가 되어야 한다. 이제 각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① '구체'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각각에 있어서 사용가치와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성격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된 대로 이러한 차이는 실체론에서 노동가치론에 의해 모든 사용가치가 노동의 산물이 되고 형태론에서 실체와 형태의 필연적인 연관에 의해 등가형태나 화폐가 상품으로 규정됨으로써 극복된다. 이런 두 가지 구체성이 동일시 됨으로써 화폐가 교환과정과 생산과정을 모두 포용하는 존재가 된다. 따라서 실체론과 상품화폐론이 논증되는 한 구체성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달리 보자면 구체의 의미가 이분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체론과 상품화폐론이 필수적인 것이므로 맑스체제 내에서 이들 이론들이 안고 있는 논리적인 부담이 한층 무겁다는 것이 드러난다.

② 양자에 있어서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태론에서 왼쪽의 '추상'이 '구체'로 바뀌는 것과 물신론에 있어서 왼쪽의 '구체'가 '추상'으로 바뀌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우선 두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생산의 무정부성은 시장의 무질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의 기본전제는 각 생산자의 노동이 '물화'한다는 것이므로 구체의 측면을 제외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문제를 없애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번째가 시도될 경우에도 맑스의 논리체계에 대단히 파괴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가치의 실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격을 부여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사용가치든지 아니면 사용가치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노동의 구체적인 성격에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맑스의 실체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맑스가 상정하고 있는 교환의 전반적인 성격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맑스는 자본주의의 교환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환은 인간의 의지나 개별적인 사용가치의 획득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 지적된 대로 구체에서 구체로 넘어가면서 화폐가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맑스적인 의미에서 화폐의 존재가 해명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구체에서 구체로 넘어가면서 화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측의 구체, 즉 화폐가 노동가치를 갖고 있는 상품이라고 볼 경우 화폐를 금속의 천연적인 속성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되거나 화폐가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물체라고 볼 때는 그것이 개인들의 합의와 총의의 대변자로서 국가에 의해서 승인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포괄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형태론의 설정을 위해서 요구되었던 제반 논리적인 고리들 중 일부가 포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선 논의를 통해서 추출된 형태론의 고리들은 상품이라는 논의의 출발점, 실체론, 그리고 실체와 형태의 필연적인 연관 및 그것의 귀결인 상품화폐론이다. 여기서 이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결합적으로 맑스의 논리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자.

- ① 형태론에서 교환의 한쪽 극에서 구체성이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품의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주어진다. 가령, 사용가치로부터 논의가 시작됐을 경우 구체성의 배제는 분석대상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방법론과 이론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우선 방법론적으로 상품물신숭배론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상품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고유성, 자본주의 분석의 우선성, 그리고 자본주의의 물화현상 등을 맑스가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자본론』의 전 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때문에 —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 이러한 방법론적인 입장은 포기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는 상품이 아니라 사용가치가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사용가치가 사용가치의 소유자들에 의해서 욕망의 대상으로 교환되는 보편적인 성격의 교환 혹은 신고전학파류의 교환이 논의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맑스의 과정론으로부터 가치나 상품이라는 자본주의 고유의 범주를 제거시킨 것과 유사할 것이다. 이렇게 되었다면 교환비율도 생산조건에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결정되거나 교환당사자들의 의지, 의사 및 의도 등 주관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결론으로 유도되었을 것이다. 이 경우 사용가치 내지 재화는 사회관계에 관계없이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된다.²⁴⁾ 그러나 만약에 사회 전반에 걸쳐 상품화 과정이 일어난다고 상정하는 경우에도 맑스가 과정론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교환의 역사적 전개

24) 물론 교환과정론에서 가치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전학파적인 교환에 이르기까지는 개인의 주관성, 즉 이기심이나 의지를 강화시키는 몇 가지 추가적인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교환의 대상과 수량에 대해서 생산물 중 자기 소비를 위한 특정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가 무조건 시장에 투입된다는 경직성이 완화되어야 한다. 달리 말해 사용가치에 개인의 주관이 결합되면서 ‘에지워스-보울리 상자’(Edgeworth-Bowley Box)를 이용한 교환, 그리고 효용 내지 효용함수의 개념이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서 교환이 개인의 주관과 관계없는 필연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이 보다 철저하게 정립될 수 있다고 본다(이 점에 대해서는 『비판』 p. 76이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의 문제점은 다소 불분명하지만 맑스가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며 핵심되는 논의를 나중에 제시하는 서술방법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 ② 상품이 출발점으로 채택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가치와 구체노동이 가치와 노동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면 가치의 실체로서 사회적 유용성이 노동가치와 함께 병존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구체성의 배제를 전제로 하는 실체론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가치론이라는 핵심을 누락시키는 것이므로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실체와 형태 간의 필연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것은 상품의 가치와 함께 특정 사용가치의 사회적 성격이 또 다른 사용가치에 의존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럴 때 가치를 표현해주는 사용가치나 물체는 사회적 성격을 안고 있는 원래의 사용가치와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용가치나 물체는 모두 각각의 자연적 속성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차별화는 불가피하게 자연적 속성의 차이에 의존케 되어 (만약 화폐가 과거와 같이 금속인 경우) 화폐를 금속의 천연적 속성에 의해 규정하는 물신숭배적 설명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 ③ 상품이 출발점이었고 사용가치가 가치의 실체에서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가치 실체와 형태 간의 필연성이 포기되었다면 상품의 物的 基盤인 사용가치가 아니라 재화 내지 그 자체로서 사용가치를 갖지 않는 단순한 물체가 화폐가 되었을 것이다. 이럴 때 화폐는 금속을 포함해 그 어떤 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금본위제도가 탈피되는 경우 화폐는 교환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개인 혹은 상품소유자들의 의지가 일치되어 계약에 의해서 고안되고 전체의 의지를 대변하는 국가의 승인으로 만들어진 특정의 사용가치 내지 유용한 재화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화폐는 개인들의 합의와 국가의 승인이라는 절차로 만들어지는 편리한 도구라는 주장이 강화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가치실체와 형태 간의 필연적인 관계는²⁵⁾ 투하노동가치설과 화폐론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맑스는 교환관계 내부에서 화폐를 끌어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만약 실체와 형태 간의 필연적인 연관을 부인한다면 맑스의 가치론은 투하노동 가치론과 형태론으로 이분화될 것이며 형태론은 오로지 자본주의의 고유성인 생산의 무정부성만을 충실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재설정될 것이다. 맑스주의자들내에서 실체와 형태 중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경향, 가정 투하노동가치론과 프랑스의 이단적인 접근 간의 대비는 이미 맑스의 『자본론』 내부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화

25) 이것은 일반적으로 실체와 형태의 관계에 대해 칸트와는 달리 맑스가 헤겔과 공유하고 있는 인식론적인 입장이다.

폐가 상품생산사회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상품간의 유물적인 관계에서 선발된 상품에 화폐의 역할이 부여된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맑스에 있어서 형태론은 보다 구체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가격문제와 화폐의 기능 兩者를 포괄하는 것이다.²⁶⁾ 이 때문에 이와 같은 균열은 가격과 화폐의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후의 논의에 파급효과를 갖게 된다.

첫째, 가격의 측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전형론이나 경쟁론이 단지가치의 양적인 정합성 문제 이외에도 논리전개상 완벽치 못한 기반 위에 구축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상품소유자 내지 생산자의 자율성이 제대로 포용될 수 없었다는 것을 상기할 때 개별 주체가 자본의 논리를 수행하는 개별 자본으로 등장하여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볼 수 있는 경쟁론에서 개별 자본의 자율성을 제대로 반영한 상태에서 가치 및 잉여가치의 법칙성이 관철되는 것인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이와 연관된 것으로서 사용가치라는 보편적인 존재가 자본주의의 고유성과 제대로 연관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재생산도식, 경쟁론과 지대론 등 그 후의 논의에서 계속 불씨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참고 [2], pp. 34~44 참조).

두 번째로 화폐의 측면에서 보면 형태론에서 제시되는 화폐론이 생산의 무정부성이라는 자본주의의 고유성을 포용하기 힘든다는 것이 된다. 맑스의 화폐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비판』에 잠재되어 있다가 『자본론』에서 형태론과 과정론의 분화를 가져온다. 그런데 과정론에서는 형태론에서 제시된 화폐론을 풍요롭게 하거나 구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품소유자를 상품관계의 본능적인 집행자로 설정해 실질적으로 배제시킴으로써 형태론의 결과에 강제로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논리가 진행되고 있다. 결국 사용가치와 상품의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등장하는 현실의 교환과정에서 화폐가 어떻게 성립되는 것인지 규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형태론에서 제시된 화폐관이 가치나 자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一次的인 抽象’ 내지 ‘暫定的인 近似值’로 설정된 것이라고 정당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화폐가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가치·가격문제나 산업자본·상업 내지 대부자본의 문제에서와는 달리 처음부터 가장 구체적인 현상과 같은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설령 화폐의 개념에 대해서도 추상·구체의 구분이나 추상수준의 등급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정론의 논리전

26) 부연하자면 맑스에 있어서 화폐는 상품이기에 때문에 노동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신고전 학파에 있어서처럼 실물부문과 화폐부문 간의 이분화 내지 이들에 대한 결합의 문제(소위 “파킨슨” 논쟁)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대가격과 물가 간의 분리도 발생하지 않는다.

전개로 봐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포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끝으로 화폐형태와 가격형태는 상호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맑스가 제시한 그대로의 화폐론이나 형태론과 가격형태론(=전형론+경쟁론)을 결합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④ 『자본론』에 있어서 위의 세 가지 요소는 상호 결합되어 사용가치·가치의 모순 및 구체노동·추상노동의 대립은 객체화 내지 외면화되어 상대가치형태·등가형태 내지 상품·화폐의 모순 및 구체·추상노동의 대립으로 발전한다. 또한 이들은 교환과정에서 $C-M-C$ 와 $M-C-M$ 의 운동 속에서 공황의 가능성을 낳고 나아가서는 자본의 운동 속에서 생산과정과 순환과정 사이의 分節로 공황의 실현을 가져오게 된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맑스는 ‘노자관계에 근거한 착취’와 ‘생산의 무정부성’이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고유성으로서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구체·추상노동의 개념이 생산과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노자관계에 근거한 착취’와 친화력을 갖고 있다고 볼 때 이것이 사적·사회적 노동의 구분에 근거한 ‘생산의 무정부성’과 상호 분리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생산의 무정부성이라는 측면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 단지 가치실체 및 상품화폐론뿐만 아니라 노동력이라는 상품에 근거한 착취관계에도 의구심이 갈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논의를 종합하건대 등가형태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추상·구체노동의 구분과 사적·사회적 노동의 구분 간의 이질성은 표면적으로는 추상·구체의 구도와 구체·구체가 대립하는 것이지만 보다 깊숙하게는 실체론과 화폐론·가격론 간의 균열과 맑스의 방법론적인 입장이 남겨 놓은 불씨라고 볼 수 있다. 위의 논의를 통해서 초보적으로 시사된 바에 의하면 아마도 이와 같은 균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체론, 상품화폐론, 그리고 상품물신론 중 적어도 한 가지가 포기되어야 할 것으로 추측된다. 프랑스의 조절학파는 상품화폐론을 포기하고 있으며 이단적인 접근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체론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맑스의 논리 전개 중 어떤 부분이 포기되어야 맑스의 전 체계에 주는 파급 효과를 가장 적게 하면서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인지가 향후의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맑스의 체계에 커다란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본 논문은 되도록 맑스의 원전에 충실하면서 필자의 입장을 정립하려는 데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 문헌에 대한 비판이 추가되어야 진정한 공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補論 : 자본에 대한 설명의 출발점

『자본론』에서는 이것이 다소 불명확하나 『학설사』를 보면 보다 명료해진다. 즉, $M-M'$ 은 대부자본(das zinstragende Kapital)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노자간의 계급관계에 근거한 자본주의의 착취를 호도시키는 자립적인 물신(das automatische Fetisch)이므로 착취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본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파악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반면, $M-C-M'$ 에는 산업자본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는 단서가 남아 있다고 보는 셈이다. 이 때문에 비록 고리대자본의 형태로서 산업자본보다 역사적으로 앞서 있는 것이지만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추론될 수 있다. 상업자본을 중심으로 한 본원적 축적의 역사적 과정이 자본축적의 일반적 법칙보다 나중에 서술 내지 논의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사용가치 그 자체’가 상품보다 역사적으로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본주의 분석의 출발점이 될 수 없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용가치가 출발점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자본주의 고유성과 연관된 것인데 비해 자본의 경우에는 경제관계에 의존한 ‘법칙성’이 강조된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전자의 경우 사용가치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경우 자본주의 고유성이 간과되거나 이것이 생산양식일반의 보편성으로 오인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후자의 경우에는 국가의 폭력이 불가피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업·고리대자본 형성이나 본원적 축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경우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정치적 영역에 따라 해명하려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설사』 3권의 논의(pp. 445~511)를 기반으로 자본 개념의 도출과 관련하여 위의 추상수준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본다면 각기 ① $M-M'$ ② $M-C-M$ 혹은 $M-C-M'$ ③ $M-[MP/LP]...P...C-M'$ ④ $M-C-M'$ ⑤ $M-M'$ 이 될 것이다. 가치와 관련하여 ①의 구체는 인식을 적극적으로 오도하는 것으로서 자본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M-M'$ 이 이와 같은 구실을 하고 있어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자본의 개념을 『자본론』에서 도출하는 데 있어 맑스가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②이며 이에 근거해서 ②를 산업자본의 구조로 설정한 뒤 ①과 ②를 각기 ④와 ⑤로 재설정했다. 여기서 맑스는 고리대자본이 산업자본에 의해서 포섭되면서 대부자본이 된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대부자본이 물신숭배의 ‘완결된 형태’(die vollendigste Form)라고 본다. ②와 ④는 각기 중상주의적 의미에 있어서의 상업자본과 자본주의내에서 산업자본의 일부로서 상업자본이 된다. 또한 ①과 ⑤는 각기 고리대자본과 대부자본으로 설정된다. 가치론에서 사용가치

와 상품이라는 출발점이 물신성에 의한 인식의 전도와 자본주의 파악의 올바른 출발점으로 설정된 것과 유사하게 자본에 관한 논의에서도 $M-M'$ 과 $M-C-M$ 은 착취에 근거한 자본개념을 전도시키느냐 아니면 산업자본에 대한 파악으로 나가느냐의 갈림길이 된다. 나아가서 가치론에 있어서 상품이라는 출발점이 자칫 교환의 필연성을 內面化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망각될 경우 사용가치로 전락케 되는 것과 유사하게 $M-C-M$ 이라는 출발점도 그 자체에 머무를 경우 상업자본으로 규정되는데 그치게 된다. 가치론의 경우 사용가치가 가치와 전면적인 교환을 전제로 재정립되는 것과 유사하게 자본에 관한 논의에서는 상업자본과 고리대자본이 각기 생산과정을 내포하는 산업자본의 특수한 형태로 재정립된다. 후자의 경우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존재가 논리적인 전개(I권 5~6장)를 통해 확립된 후에 이것의 역사적인 형성과정이 본원적 축적에 관한 논의(I권 26~28장)에서 재정립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양자에 있어서 모두 상품이라는 존재가 원하는 결론을 가능케 해 주는 단서가 되고 있다. 다만 『학설사』에 있어서는 이미 쫓고(1992)에서 밝힌 대로 가치형태가 아니라 잉여가치가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며 후자의 경우 '논리적인 매개'(Vermittlung)의 존재가 강조된다는 것이 다르다.

자본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에서 이와 같은 추상수준의 변동이 순조로운데 비해 교환 및 화폐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와 같은 변동이 순조롭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후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분석의 단위가 개별상품 소유자로 바뀌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자본에 대해서도 『자본론』 제3권에 등장하는 대로 개별자본의 수준으로 내려오는 전형과 경쟁론, 특히 경쟁론에 있어서는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參考文獻 ◆

1. 흥 훈, "밀턴 프리만의 실증경제학 방법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현상과 인식』, 1982 봄호.
2. _____, "맑스 경제학의 두 가지 축 : 노동가치설과 내적 논리", 『현상과 인식』, 1991 가을호.
3. _____, "스미스와 리카아도에 대한 맑스의 비판 비교 : 「잉여가치학설사」를 중심으로", 한국경제학회 1992 하계학술대회 발표.
4. Althusser, L. & E. Balibar, *Lire le Capital*, François Maspero, 1968.
5. Kojève, A., *Introduction to the Reading of Hegel*, Basic Books, 1969.

6. Marx, K., *Capital*, Vol. I, International Publishers, New York, 1967.
7. ———, *Theories of Surplus Value*, Part I, III, Progress Publishers, Moscow, 1969.
8. ———, *Deutsche Ideologie*, MEW Band 3.
9. ———,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EW Band 13.
10. ———, *Randglossen zu Adolf Wagners "Lehrbuch der Politischen Ökonomie"*, MEW Band 19.
11. ———, *Das Kapital*, Erster Band, MEW Band 23.
12. ———, *Theorien über Mehrwert*, MEW Band 26. 1, 26. 3.
13. ———,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EW Band 42.
MEW : Marx-Engels Werke, Dietz Verlag, Berlin, 1987.